

지방업체 우선…공공·지자체 제한입찰 상한 150억까지 확대

정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발표 가점제도 개선 …2조6000억원 수주 확대 예상

정부가 지역 건설업체 살리기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대폭 상향한다.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1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낙찰자 평가시 지역업

체 참여 비율에 대한 가점도 늘린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지역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부도나 법정관리로 내몰리며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방공사는 지역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88억원 미만) 및 지자체(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기존 88억~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시물레이션에 따르면, 기존 상황 시 지역업체 수주 금액은 기존 대비 7.9%(약 2조

6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업체 우대 평가도 강화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에 가점을 주는 근거를 신설한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지역경제기여도 만점 기준을 상향하고, 관련 가점도 확대한다.

기술형 입찰에서는 입찰참가자자산점심사(PQ)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배점

제(5점)로 신설하고, 낙찰자 평가에서는 지역자재·장비 등 활용계획 제출 시 가점(2점)을 부여한다.

이러한 지역업체 우대 평가 신설로 지역업체의 수주 금액은 종합심사 분야 약 5196억원, 기술형 입찰 약 2000억원 등 약 7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타지역 기업이 형식적으로 본사만 이전한 뒤 혜택을 가져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역 건설업체의 형식적 이전 방지를 위해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페이퍼 컴퍼니 선별을 위해 낙찰예정자 심사 시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사전점검제도 시행한다.

답합 방지 차원에서 조달청-공정거래위원회 간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대책 관련 시행규칙·계약예규를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외국인 주식 매도세에 환율 1465.6원

미국 노동시장 부진…투자자 심리 부추겨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에 소폭 올랐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 대비 0.3원 오른 1465.6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4.3원 내린 1461.0원으로 출발. 상승 전환해 오후 한때 1468.0원까지 올

랐다.

환율 상승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1조512억원을 순매도한 게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증시는 20일 발표되는 미국 9월 고용보고서와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등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간밤 미국 노동부가 지난달 12~18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2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부추겼다.

한편,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06% 내린 99.524를 기록 중이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3.45원으로,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44.87원보다 1.42원 하락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미국 경기 부진 우려에 코스피 ‘주춤’

롤러코스터 장세 속 3929…외국인 1조512억 매도 폭탄

코스피가 미국의 경기 부진 우려와 ‘AI 버블’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3930선 코앞에서 장을 마쳤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24.11p(0.61%) 내린 3929.51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13.02p(0.33%) 상승한 3966.64로 출발한 후 가파른 하락세를 그릴기 시작해 오전 9시 38분께엔 2.5% 내린 3.854.95까지 밀렸다.

그러나 전날 3.32% 급락에 이어 이날까지 투매가 이어진 데 대한 반발매수세 유입이 거세지면서 한때 3966.64까지 올라 상승 전환하는 등 높은 변동성 장세를 나타냈다.

지수하락을 주도한 건 외국인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512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4491억원과 6255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 가운데 금융투자와 투신이 각각 4605억원과 887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종목 대부분이 내렸다.

역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을 비롯한 일부 기관투자자의 엔비디아 전량 매각 결정을 계기로 AI 버블 논란이 재점화한 데 것에 더해 미국 경기 및 노동시장의 부진을 보여주는 지표가 잇따라 나온 것이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한때 4.21% 급락한 54만6000원까지 밀렸으나 이후 낙폭을 상당 부분 반회해 1.40% 내린 56만2000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는 1.33% 내린 9만6500원으로 마감했다.

HD현대중공업(-4.81%), 한화오션(-3.76%), 한화에어로스페이스(-1.74%), 두산에너지(-1.33%), LG에너지솔루션(-1.24%) 등도 비교적 낙폭이 컸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7.38p(0.84%) 내린 871.32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홀로 703억원을 순매도했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52억원과 784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4조5542억원과 7조8546억원이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분부는 19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혁신도시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지역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지역 제품 구매 촉진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상생협의체 회의…우선구매 방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분부는 19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혁신도시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지역상생협의체 회의’를

개고, 지역 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과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노종호 광주전남제주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지역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10여명이 참석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산통신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10개 기관이 참

석했다. 회의에서는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이찬영 전남대학교 교수의 ‘광주·전남 경제동향’ 강연과 ‘알기 쉬운 공공구매제도 활용’ 교육이 진행됐다.

임경준 광주전남회장은 “지역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과 R·D 투자 등으로 공공기관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한국농어촌공사는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ESG 경영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농어촌공사, 국가품질혁신상 대통령 표창

ESG 경영 부문…농어촌 맞춤형 경영 성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ESG 경영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1975년부터 품질경영을 혁신해 산업 발전과 국가 위상 강화에 이바지한 유공자와 유공 단체를 포상해 오고 있다.

공사는 심사에서 ‘농어촌’ 그린가치 ESG 2030 비전을 선포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 모든 부문에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성과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환경(E)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녹색경영 성과를 두드러졌다. 공사는 과거 30년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기후변화고 설치 후에는 연동·배관에 이격이나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설치 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최초로 건설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협약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4년에는 244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해 ESG 도입을 지원. ESG 문화 확산과 포용적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해 주목받았다.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대국민 투명·소통 경영 실천 의지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사는 전국 53개 농어민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간담회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농식품부, 농어민 등이 참여하는 ‘농어촌 물포럼’도 운영 중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공사가 ESG를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전 임직원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실천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사업과 ESG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영산강권역 맞춤형 자연기반 관리전략 적용해야”

광주연구원 ‘정책포커스’ 발간

광주연구원은 지난 18일 발간한 광주정책포커스 21호 ‘기후위기와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한 하천관리 방안’에서 영산강 권역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기반 하천관리 전략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홍수터 확보, 하천 내 완충·저류공간 조성, 습지 복원, 여울 및 하안 구조 개선 등 자연기작을 활용한 접근이 치수·수질·생태 기능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제방 보강이나 직강화 등 물리적 구조물을 중심으로 빈발하는 강우에 대응해 왔다면,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극한강우와 낮은 빈도의 강우에 대비해 하천 주변부의 완충능력과 유량조절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이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다. 홍수터와 둔치부를 적정하게 활용할 경우 유량을 자연스럽게 분산해 하천의 부담을 줄이고 수변 생태환경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영산강과 광주천, 황룡강 등 주요 하천이 도시와 가까이 인접한 만큼 상·중·하류의 물리적 특성과 주변 토지 이용 현황을 함께 고려한 단계적·유역단위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하천 유지관리, 모니터링, 수질·수생태 진단, 시설관리 등 다양한 요소가 장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점에서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수 연구위원은 “홍수터 확보와 수변의 완충기능 회복은 하천 본래의 유량 조절 기능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겨울철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42% 불과

소비자원 “자격 여부 확인·시험 가동해야”

난방 불량과 누수 등 보일러 관련 피해가 겨울철에 급증하지만, 피해구제 신청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584건 중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 발생한 피해가 56.5% (330건)로 집계됐다.

분쟁 사유로는 제품 하자가 61.8% (361건)로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이 28.1% (164건)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누락 등 행정 처리 불만 4.3% (25건), 부당한 대금 청구 3.2% (19건) 순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제품 하자 중에는 난

방·온수 불량, 설치 불만 중에는 배관·연통 등 주요 부품을 잘못 설치한 사례가 각각 가장 많았다.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584건을 사업자로 보면 귀뚜라미(182건)가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109건), 대성밸티에너시스(100건), 린나이코리아(39건) 순이다.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현금·수리 등으로 보상받은 비율(합의율)은 42.3% (247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일러를 선택할 때 시공업체의 법적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 후에는 연통·배관에 이격이나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설치 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